

사전투표를 치솟자...여야, 광주·전남 2030 겨냥 총력전

민주 청년선대위 대학생 대상 유세 국힘, 이준석 대표 8일 광주 유세

광주·전남의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이 치솟으면서 여야가 선거 막판 '2030'을 겨냥한 '호남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를 통해 '호남 진보 진영의 결집'이 시작됐다고 판단, 젊은 층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호남의 젊은 층 지지를 이끌어 내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원선대위 청년유세단'은 7일 북구 전남대 일대에서 첫 투표를 하는 대학가 새내기를 대상으로 유세 활동을 했다. 이날 유세에는 김태진 공동선대위원장의 사회로 김영환 공동선대위원장, 이지환 유세본부장, 이명노 유세단장, 장준후 유세부단장,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등 2030 세대가 나서 청년세대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장준후 유세부단장은 현재 전남대학교 재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와 선배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와 정치 참여에 있어 청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직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학우들께서는 3월 9일 본투표에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선거막판 승부처인 수도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이날 '호남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호남은 역사적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셨던 민주주의, 개혁, 평화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님을 탄생시켰듯이 호남인의 선택이 곧 대한민국의 역사였다"고 평가했다.

또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저는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 남은 일정을 소화한다. 호남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망이 서울, 경기에 전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역사의 후퇴를 막고, 미래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호소드린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모지인 호남에 공을 들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선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8일 광주를 또다시 찾아 윤석열 후보의 지원 유세전을 펼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8일 오후 광주에서 대학생 유세단과 함께 집중 유세를 한다.

이 대표는 대학가 등 젊은 층이 주로 모인 곳을 돌며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대학생으로 '키보드 유세단'을 구성하고 젊은 층이 주로 모인 곳에서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전남대에서 사전투표를



“투표해 주세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운동원들이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서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하며 호남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호남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득표율 30%를

달성하고 싶다”면서 “비록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역사에 기록될 호남 득표율 기록에서 한 표가 더해질

때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확실한 개선책 내놔야” 국힘 “불공정 몸체는 文”

여야, 사전투표 관리 부실 공세

대통령 선거 막판 불거진 사전투표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7일 여야의 공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초박빙 대선'의 막판 표심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엇갈린 선택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선관위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가는 한편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당장 대선 본투표일이 이를 앞두고 다가온 만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확진자 사전투표에 큰 혼란이 생겼는데 중앙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다. 사전투표 일에 중앙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 했다”며 “선관위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의 명예와 실력이 회복되고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완전히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관위가 이번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본투표에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론과 정부책임론 등에는 선을 그었다.

논란이 확산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정부·여당이 떠안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야당이 정부의 선거관리 책임을 묻는 데 대해 “선거관리에 왜 정부 이야기를 하느냐. 선관위가 정부냐”며 “정부가 선관위를 지휘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막 덮어씌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총체적인 선거관리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번 사태를 연일 정권심판론으로 연결 짓고 있다.

선관위 책임자들을 향한 사퇴 요구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선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는 단순한 행정부실을 넘어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선관위를 이토록 타락시킨 편파 판정의 중심에 바로 노정희 위원장이 있

다”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불공정 선거관리를 조장한 바로 그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엉터리 선거관리를 해놓고 이 정부가 국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선거관리 부실을 비난하면서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는 발을 대지 않고 있다.

현 판세를 윤석열 후보 우세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부정선거론이 추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또 제주도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마친 투표함을 규정대로 보관실에 두는 대신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가 기표용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다 논란을 빚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언론노조가 민주당 전위대라니...尹 책임 물을 것”

언론단체, 윤석열 명예훼손 고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현업 6단체는 7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남 언론노조를 더불어민주당이 앞세운 강성노조 전위대의 침범이라며 뜯어고쳤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노조는 작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 민주당을 향해 강력한 비판과 항의투쟁을 전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노조를) 민주당의 집권 연장을 위한 전위대라 칭한 구체적 근거를 윤 후보 스스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또 “언론노조를 뜯어고치겠다는 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을 넘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언론 말살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는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발언에 대한 해명과 비판 수용, 사과를 윤 후보에게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윤 후보를 고소할 계획이다.

이날 회견은 언론노조 외에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함께했다. /연합뉴스

민주 광주시당, 산불지역 구호물품·인력 파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제20대 대선 선대위는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지역에 구호물품과 자원봉사인력을 파견한다.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 산불로 인해 현재 여의도면적 49배에 달하는 살림이 불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시당은 7일 산불피해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했으며, 자원봉사자와 구호물품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